

▣ 政府 施策 ▣

##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마련 – 수출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육성과 연계 추진 –

○ 정부는 최근 엔고의 급속한 진행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機械類 · 部品 · 素材 등 자본재의 국산화 여건이 改善되고 있고, 일본이 그동안 海外移轉을 미루어 왔던 高度技術品目 分野에서도 해외이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이 자본재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한국경제의 世界化를 위한 資本財產業 育成對策”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資本財產業 育成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지금까지의 단순한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輸出戰略產業으로 育成키로 하고, 이를 위해 試製品開發에서 販路確保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며 자본재산업 육성시책을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國產機械購入資金의 금리수준등 금융조건이 外貨貸出보다 不利했던 점을 改善하기 위해 95년에 外貨表示 國產機械購入資金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96년중에는 통산부장관이 재경원장관과 협의하여 告示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外貨貸出對象에 국산기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계류 생산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機械類專門 割賦金融會社 設立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둘째, 工業發展基金中 試製品開發資金 규모를 95년 1,200억원에서 96년에는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開發對象品目的 대형화에 따라 품목당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試製品開發資金體制를 改編하여 수출가능성이 크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戰略品目 중심으로 개발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수요 대기업이 중소 생산업체와 공동개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본재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技術開發準備金의 積立限度를 현행 수입금액의 3%(기술  
집약 산업은 4%)에서 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셋째,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해도 신뢰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국산  
기계 品質認證제도를 도입하고 품질인증품목에 대해서는 瑕疵保證制度를 실시하여 하자보수를 保  
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업기술원등에 『品質認證센타』를 설치하여 품질평가에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優秀品  
質마크』를 부여하고 『優秀品質마크』제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5  
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넷째, 기술·인력 및 정보부족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재산업에 대한 兵役特  
例 產業技能要員의 配定比率를 상향조정하고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에 장기근무하는 現場技術人力  
에 대해서는 勤務年限에 따라 所得稅를 輕減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능대학과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교육센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년 다기  
능과정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하고 실습장비의 보강을 위해 각종 이공계 교육기관등의  
노후 교육기자재를 최신장비로 대체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인력양성을 위해 設計人力 養成機關과 訓練課程을 擴大하고 외  
국의 유능한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해 永住權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創業, 技術, 經營, 販賣 등 모든 분야에 대한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업  
단지, 인근 지역등에 『資本財產業 綜合支援센타』를 設置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地方自治團體가 未分權工團을 外國人 企業에 分讓 할때 工  
團造成原價보다 분양가를 낮출 경우 차액의 50%를 中央政府가 擔當토록 하고 貸貸의 경우에는 敷  
地買入費 50%를 부담키로 했다.

광주 평동의 外國人 傳用工團의 分讓價를 인근 공단수준인 평당 28만 6천원으로 引下調整하고 임대  
할 경우 일정기간 貸貸料를 대폭 輕減토록 하며 외국인 전용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輸入先多邊  
化制度의例外認定을 통하여 日本 機資材 및 部品 輸入을 許容하기로 했다.

특히 대일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중 자동차부품, 전자등 業種別로 對日投資誘致使節團을 派  
遣하고 일본의 『對韓 投資調查團』을 誘致키로 했다.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따라서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 부터 주로 技術導入과 合作投資를 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設備와 部品을 輸入하게 됨에 따라 對日逆調가 深化되고 있다.

94년 전체 貿易收支가 63억 \$ 赤字인데 비해 對日 貿易收支는 119억 \$ 적자로서 전체 무역적자의 2배에 가까우며 이중 자본재의 대일무역수지가 138억 \$ 적자에 달해 자본재산업의 自立없이는 무역수지의 黑字定着이 困難하고 선진산업 구조로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 이와 같은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5년경에는 對日 貿易收支가 均衡水準에 근접하게 되고 資本財의 輸出規模가 1,500\$ 을 上廻하게 되므로써 전체 수출의 60%를 점하게 되어 자본재가 우리나라의 戰略輸出品目으로 浮上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展望했다.

### ■ 資本財產業 育成對策 ■

#### ■ 추진전략 ■

- 국산화 차원을 넘어 資本財產業을 21세기 우리나라의 輸出戰略產業으로 育成
- 戰略分野에 대한 集中 支援으로 세계 最高 品質의 製品 生產
  - 自動車, 電子 등 수요대기업이 있는 경우, 需要大企業이 주도적으로 기계 및 부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
    - 大企業이 中小 機械 · 部品企業을 지원하는데 대하여 정부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一般機械와 같이 특정 수요대기업이 없는 경우, 通商產業部가 수요 · 생산업체의 참여하에 開發計劃 推進
  - 試製품 개발에서 販路 확보까지 一貫性 있는 支援體系 確立
    - 資金支援과 함께 技術, 人力, 情報 등 기반조성 확대
    - 一般機械, 自動車, 電子 부문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
- 바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投資誘致 努力 強化
-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이 中小企業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推進

## 1. 需要基盤 擴大

### 〈現況과 問題點〉

- 國產機械購入의 금융조건이 外產에 비해 불리
- 外產機械 구입시 금리(외화대출금리) : 國際金利(7% 수준)
- 國產機械구입자금 금리 : 國內實勢金利(13~15%)

### 〈對策方案〉

- 96년까지 國內外 金融條件의 불균형 解消
- 95년중 國제금리수준의 外貨表示國產機械購入資金 規模 擴大 : 1,200억원→1조원
- 96년중 外貨貸出制度를 전면개편하여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뿐만 아니라 國產機械 구입 및 리스용도 허용
  - 저금리의 海外資金을 활용하여 국산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
  - 외산과 국산의 金利差異 해소로 국산기계의 가격경쟁력 향상
- 金融對象 : 통산부장관이 재경원장관과 협의 · 고시하는 品目
  - 우선 파급효과가 큰 核心品目 중심으로 告示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96년 30%, 97년 50%)
- 金利引下效果 : 지정고시품목은 5~7%p, 국산기계류 전체는 96~97년중 1.5~2.5%p로 예상

- 「機械類專門 割賦金融會社」設立 許容

— 機械類生產企業들의 컨소시움 형태로 설립

- 機械類 輸出 支援 擴大

— 연불수출자금 확대 : 28,000억원(95)→35,500(96)

— 기계류 수출에 對外經濟協力基金 우선 지원

## 2. 生產 支援 擴大

### 〈現況 및 問題點〉

- 開發資金支援規模가 不充分하여 핵심기술개발에 한계
- 多數品目을 少額支援하여 지원효과 분산(평균 2억원 지원)
- 標準化가 미흡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

〈對策 方案〉

- 工業發展基金中 試製品開發資金 支援 擴大
  - 支援規模 : (95)1,200억 원 → (96)2,000억 원
  - 품목당 支援限度 : 5억 원 → 20억 원 (필요시 特別한도 인정)
  - 戰略品目에 대해 償還期間 (2년거치 3년상환) 연장 검토
- 多數品目에 대한 少額支援方式 을 戰略品目 中心으로 轉換
  - 需要企業이 중소생산업체와 共同開發하는 品目을 重點 支援
- 新技術 創業企業에 대한 金融支援 強化
  - 新技術金融會社 대출심사시 「技術性」의 配點比率을 上向 調整
- 자본재 기업의 技術開發準備金의 적립한도 상향조정
  - 현행 매출금액의 3% (기술집약산업 4%) → 5%
- 「標準化企劃團」을 工業振興廳 (단장 : 차장)에 설치
  - 표준화를 위한 產業技術基盤造成資金 지원 확대

3. 品質保證業務 強化

〈現況 및 問題點〉

- 優秀品質을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 않아 購買忌避

〈對策方案〉

- 品質檢查業務를 지원하는 「品質認證센타」를 설치
  - 設置機關 : 공업기술원 또는 연구기관
  - 機能 : 認證업무의 窓口역할, 品質自體評價 및 認證, 國내외 적정 인증기관에 依賴, 國내외 자본재의 品質比較 評價
  - 外國機關의 품질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海外市場開拓基金에서 일부 지원
  - 품질평가에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優秀品質마크」 부여
- 「優秀品質마크」 제품의 生産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技術信用保證基金의 보증확대 (15억 원 → 30억 원)
  - 創業企業에 대한 技術信用保證基金의 간이심사 지원 강화
    - 창업 1년미만 3억 원까지 (신규), 3년미만 3억 원 → 6억 원까지
- 創業投資會社가 投資할 경우에는 創業支援基金에서 50%까지 자금융자

- 「優秀品質마크」 품목에 대해 「瑕疵保證制度」 실시
  - 중대한 하자발생시 製品價格 全額을賠償
  - 이를 위해 기계공제조합의 機械類 瑕疵保證基金에 정부와 민간이 50%씩 出資하여 기금 규모를擴大

#### 4. 技術・人力 및 情報支援

##### 〈現況 및 問題點〉

- 완성재를 중심으로한 組立加工技術과 半導體素材 技術은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접근하였음
  - 그러나 電子, 機械・設備, 部品・素材技術은 선진국에 크게 뒤지며, 核心部品과 設計技術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
- 工高, 專門大, 工大 등 기술 및 기능인력 供給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不足
  - 교육기관의 實習裝備가 불충분하고 老朽함
- 情報管理體制가 未洽하여 정보수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

##### 〈對策 方案〉

- 工高, 專門大, 工科大學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전체 고교생중 工高生 비율을 계획대로 확대
    - 94년 14%→2,000년 22%
- 技能大學 등 2년 다기능기술과정에 專門大 수료 학력 인정
  - 수요가 많은 短期職業訓練課程(주·단조, 금형, 열처리, 용접 등)의 연수대상 人員을 擴大
- 기술수준이 낮은 設計부문의 技術開發 및 人力養成
  - 特定研究開發事業 지원 규모를 擴大하여 核心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강화
  - 產業技術基盤造成資金 支援을 擴大하여 設計人力 양성기관 및 과정 확대
- 財政支援을 확대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教育機資材를 연차적으로 쇄신 國產으로 대체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脱역기술자로 「技術指導團」을 구성하여 核心隘路技術에 대한 現場指導를 강화
- 외국의 有能한 技術者 誘致方案 검토(예시: 永住權 부여 등)

## 5. 外國人投資의 積極 誘致

- 地自體의 外國人企業 誘致에 대해 중앙정부지원 확대
  - 未分讓工團을 외국인기업에게 공단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그 差額의 50%(신규 조성 30%)를 中央政府가 부담
  - 貸貸의 경우 중앙정부가 敷地買入價의 50%(신규조성 30%) 지원
- 광주 평동 外國人用工團의 入住條件 改善
  - 分讓價를 인근 공단 수준(평당 28.6만원)으로 引下調整
  - 임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년) 貸貸料를 대폭 輕減
- 輸入先多邊化制度의例外 認定
  - 外國人傳用工團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일본의 기자재 및 부품수입을 허용
- 우수외국인력의 滯留 上限期間 延長(4년→6년)
- 對日投資誘致使節團 활동 強化
  - 自動車 部品, 電子 등 업종별 대일 투자유치단 파견
  - 일본의 「對韓投資 調查團」 유치
  - 95년 11월 東京에서 「韓國部品綜合展示會」 개최

## 시설재용 外貨 대출 融資 比率 축소 - 中企융자비율은 現行 유지 -

대기업의 시설재수입용 외화대출 융자비율이 축소된다.

또 은행의 3년이상 중장기 외화대출에 적용되는 중장기자금 조달비율의 산정기준이 강화돼 단기해 외차입에 많이 의존해 오던 은행이 단기차입을 중장기차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외화대출제도 개편방안을 金通委에 상정,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韓銀세칙 개정을 통해 5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설재수입용 외화대출 비율은 현재 80~90%에서 70%로 낮춰 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중 제조업시설재 수입용 외화대출은 90%에서 70%로 20%P가 낮춰진다.

또 비제조업가운데 중고선박도입용 · 항공기 도입용 · SOC 시설재용 외화대출 융자비율이 각각 80%에서 70%로 낮춰진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융자비율은 현행 80~100%의 융자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업부설연구소 · 대학 · 연구기관등이 이용하는 연구용시설재용 외화대출 역시 현행 90%의 융자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 ▲ 외화대출 융자비율 조정내용

구 分	대 기 업	중소기업
시설재 수입자금		
-제조업	90→70%	100%
-비제조업		
(연구용 시설재)	90%	90%
(중고선박도입)	80→70%	90%
(항공기 도입)	80→70%	80%
(SOC 시설재)	80→70%	90%
해외직접투자자금	70%	80%

#### 한편 정부는 최근 외화대출의 증가와 延支給수

입 기간확대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해외단기차입이 크게 늘어 은행의 외환수급이 불안정해 지는 것으로 판단, 외화대출재원에 대한 중장기자금조달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현행 韓銀세칙은 '외화대출재원의 50% 이상을 3년이상 중장기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데 외환당국은 50%의 비율은 유지하되 비율산정시 한은보유고 지원분을 중장기차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이에따라 한은보유고 의존비율이 높은 서울신탁 · 제일 · 조흥 · 상업 · 보람등 일부은행이 총6억달러 가량의 단기차입을 늦어도 금년말까지 중장기차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工業發展基金 企銀서 관리 – 하반기 부터 시행 –

정부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사업 등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공업발전기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기업은행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사업자단체)로부터 공발기금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정한 후, 한국은행에서 기금을 가져다 해당기업의 주거래은행에 전달하던 통산부의 업무중 기금을 전달하는 일은 기업은행이 맡게 됐다.

통산부 관계자는 공발기금의 67%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기업은행에 맡기면 응자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발기금 위탁관리자로 기업은행을 명시한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른 시일안에 국무회의에 상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공발기금 관리기관 지정에 특혜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이 기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을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전기용품 形式承認표시 간소화 – 절연종류 · 풍속등 安全性무관사항 삭제 –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표시가 대폭 간소화됐다. 또 형식승인 표시대상 품목으로 전기정미기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공업진흥청은 급속한 기술개발로 전기용품이 소형·경량화되는 추세에 맞춰 형식승인 표시에 안전성과 무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라벨의 크기를 작게 개선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안전과 무관한 △절연종류(전기면도기 등 148품목) △기동전류(모발건조기 등 34개 품목) △길이(합성수지절연전선 등 20개 품목) △최고풍속(선풍기) △풍량(환풍기) △흡입률(전기조제기) △필레멘트종류(백열전구) △증기압(나트륨램프) 등의 표시를 삭제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 라벨의 크기도 대폭 축소(3분의 1)가 가능해졌는데 예를 들어 모발건조기의 경우 지금까지 형식승인 라벨에 형식승인번호, 정격전압, 정격소비전력, 절연종류, 기동전류를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절연종류와 기동전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전기정미기, 전기주름펴기, 전자식금전등록기 등 3품목은 새로 형식승인 표시대상에 추가됐다.

# ISO 14000인증 및 CE마크 획득 지원기관 선정

## - 工振廳, ISO14000 6개 · CE마크 5개 기관등 -

오는 96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ISO14000시리즈(환경경영인증체제)의 국내인증 후보기관 6곳이 선정 됐다.

공업진흥청은 ISO 14000시리즈의 후보 인증기관으로 한국품질인증센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생 산기술연구원 품질평가센터, 한국능률협회 인증센터,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96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환경영영인증체제인 ISO 14000시리즈를 제정해 시행할 계 획으로 있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96년 인증 실시를 목표로 환경영영 시범인증계획(Pilot Program)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후보 인증기관 선정은 이 사업의 일환이다.

이들 후보 인증기관들은 앞으로 공진청에 의해 선정될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의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지도, 심사하게 된다.

공진청은 이달초 지도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집중지도를 실시한 후 11월 최종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환경경영시범기업’ 인증 및 환경영영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공진청은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건재시험연구 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등 CE마크 부착 의무화제품과 관련이 있는 5개 연구기관을 CE마크 획득지원 기관으로 선정해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제공, 절차안내 등을 전담토록 했다.

또 이들 기관이 EU공인시험기관과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해 국내에서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교 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부착이 의무화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필수적인 전자파내성(EMS)시험설비가 국내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 설비를 오는 9월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하는 한편 국립공업기술원에 도 96년초까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U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이달중 CE마크 획득 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술지도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CE(Communaut European)마크란 EU가 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한 13 대 품목류에 대해 안전·위생·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시킨 상 품에 대해 부여하는 마크로 이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은 유통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13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EU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